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5. 7(목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장은석 • ☎ (044) 201-3573, 3574 	
	건축안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홍성준, 사무관 박영주 • ☎ (044) 201-4987, 4988 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8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8(금) 11:30 이후 보도 가능		

‘반복된 인재’ 악순환 고리 끊는다

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

- 국토부,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회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일, “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(4.29)”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* 2기 킥오프 회의(장관 주재)를 개최했다.

* 1기 혁신위원회('19.10~'20.1월)를 통해 「건설안전 혁신방안」 마련·발표('20.4.23)

-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, 공공기관, 노동조합, 시민단체,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,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·투입됐다.
-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(4.30)에서 범정부 TF*(단장 : 국무조정실장)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,
-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, 고용부·행안부·기재부·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혁신위원회 키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,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.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.

① (건축자재 기준 강화)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뿔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.

-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,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, 창고·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.

② (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) 발주자와 시공사·감리 등 건설 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

-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.
- 또한,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
③ (현장 이행력 강화)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.

-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, 중·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.

- 아울러,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·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.

□ 오늘 키포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·건의된 과제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고,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.

-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(가칭)을 마련하고,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, 참담한 심정”이라면서

- “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,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”고 다짐했다.

  <p>공공누리 공표목적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장은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, 건축안전과 박영주 사무관(☎ 044-201-498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